

# 외국인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cess of finding foreign missing persons

이 건 수\*\*  
Lee, Keon-Su

### 《 목 차 》

- I. 서 설
- II. 외국인 실종자 법적 적용 범위 및 선진사례 검토
- III. 외국인 실종사건 대응 문제점
- IV. 외국인실종 사건 대응 개선방안
- V. 마무리

### [국 문 초 록]

현재 우리나라에는 출입국관리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8월 31일 기준 외국인

■ 투고일자: 2020년 10월 31일    ■ 심사일자: 2020년 11월 24일    ■ 게재확정: 2020년 11월 25일

\* 본 연구는 2020년도 경찰청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사업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NRF-2020M3E3A1057443).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Ph.D).

2,110,610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사회의 모습은 과거와 달리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고 활동함에 따라 사회문화 등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하철을 타면 어느 칸에서나 외국인을 만날 수 있으며, 농촌에서도 외국인 새댁이 호미를 들고 밭을 매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다. 법무부 통계에도 확인이 안 되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약 394,879명 정도 된다. 이러한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범죄안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실종사건, 변사사건 발생 시에 신원파악의 어려움으로 장기미제 사건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사회에 외국인이 함께 살고 있으나 현재 외국인에 대한 각종 범죄사건, 실종사건에 대한 정확한 범죄통계, 범죄예방대책, 부서 및 기관 간 자료공유부족으로 심각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실종자 발견에 범국가적 네트워크 구축,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실종법,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 주제어

외국인 실종, 외국인 범죄통계, 범국가적 네트워크, 실종법, 시스템 구축, 통합검색.

## I. 서 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 거주지역, 실종사건, 범죄노출 통계, 신원구축 등 모든 자료가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sup>1)</sup>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소 외국인 자료, 경찰청 범죄사건 발생 자료 등 기관 간에 자료공유, 공조미비,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sup>2)</sup> 따라서 외국인 관련 범죄발생, 실종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발생건 하나하나에 기관을 방문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번거러움과 공조부족으로 대부분 사건이 미제로 남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신원 불명의 하반신 시체가 발견되고 3일 후에는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 인근에서 하반신 시체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상반신 시체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같은 날 인

1) 출입국관리사무소, 2020년 8월 30일자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 황문규, "초국가적 범죄의 개념과 우리나라 경찰의 대응 방향", 경찰학 연구 11(4), 2011.

천에서는 건물 공사 중 공장 화장실 바닥에서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언제 어디서 사라졌는지 모르는, 어쩌면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었는지 모를 몸이 토막이 나고 백골이 되어 발견된 것이다. 안산 대부도 시신에는 왼쪽 위 어금니 1개가 금니, 변사자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엔 은색 반지 3개가 끼워져 있다. 시신의 상반신을 발견했지만 얼굴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식별이 불가능하고 지문 또한 손가락이 물에 붓고 젖은 상태여서 채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지문이 채취될 경우 피해 남성이 미성년자이거나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일 경우 신원이 확인이 불가능한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의 백골 상태 시신이 발견된 화장실은 26년 전 지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안전보장, 신원확인, 실종사건 처리 문제 등에 대한 법적 문제 및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sup>3)</sup>

## II. 외국인 실종관련 법적 적용범위 및 선진사례 검토

### 1. 외국인 실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실종자 찾기 적용범위

외국인이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의 법률상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하지만 참정권, 광업 소유권, 출입국 등과 관련된 법적 권리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체류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및 90일 미만 체류할 목적의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총 국내 체류외국인을 의미한다. 외국인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청은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 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실종신고를 접하고 실종자 발견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외국인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부족, 관리부

3) 윤상연, 염윤호, 유고은, “치안 목적 안면인식기술 관련 법제도 검토: 실종자 신원확인 복합인지 기술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20(3), (2020.9), 25-61면.

족, 신원파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해안가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2천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해안가 변사사건은 총 2천327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2구 이상의 변사체가 발견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남·서해안에 변사사건이 집중됐다. 해경 산하 5개 지청별 통계를 보면 남해청(746건)과 서해청(603건)이 가장 빈번했고, 중부청(388건)·동해청(346건)·제주청(244건)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변사자 중 160명이 외국인이며, 중국과 인도네시아 국적이 가장 많았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변사체도 68구에 달한다. 대부분 미제사건으로 종결이 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실종에 대한 기관 간 정보공유, 실종자 관리, 변사자 관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2. 외국인 자료 시스템 활용 문제점과 구축 필요성

우리나라에 출입하는 외국인 관리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전담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 관련자료, 신원파악, 범죄전과, 각종 발생 사건 등이 경찰 등 관련기관과 전혀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해도 외국인에 대한 소재파악, 자료공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실종되었을 경우 신원확인 및 소재파악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sup>5)</sup>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과거 잘못된 제도를 버리고 경찰청과 출입국관리소, 외국인 정책 기관 간에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본적인 사항 및 자료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외국인의 안전보호, 실종예방, 각종 범죄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경찰은 그 외국인에 대한 신원파악, 자료조사, 기관에 공문발송, 자료 통보 등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국 어느 지역에 어떤 외국인이 거주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련 자료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외국인 인권 및 실종 등 범죄관련 안전보호에 대한 사각지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진수, “초기 실종사건 위험성 판단에 따른 대응절차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3), (2020.9), 549-571면.

5) 김양현,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11(3), (2009), 33-56면.

### Ⅲ. 외국인 실종사건 대응의 문제점

#### 1. 외국인 신원자료 구축 시스템 미비와 공유 부족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관련 신원자료구축과 기관 간 정보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3년간 외국인 범죄인원이 13만 5,76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4만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3만 8,378명, 인천청이 7,766명 순이다. 경기남부와 서울이 전국의 58%를 차지했다. 범죄유형으로는 마약범죄가 작년에 2017년 대비 72%가량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범죄자 중 불법체류자인 경우도 매년 증가해 지난 3년간 1만 5,977명으로 12%정도를 차지했다. 지방청별로 경기남부가 3,504명, 서울 2,425명, 경남 1,328명 순이다. 이중에 실종사건은 통계조사에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경우 신원자료 구축, 시스템 구축과 공유 등으로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안전보호, 실종예방 및 실종자 조사 등을 강화해야한다.<sup>6)</sup>

#### 2. 국가 간 협력 연계망 부족

시대는 사람과 자본의 국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범죄도 국경을 넘는다.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한 해 300만명이 넘고, 우리나라는 거주 외국인이 2백만명에 달하는 국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모른다. 사정이 이런대도 국가 간 협력 시스템 미비, 출입국관리소와 경찰 간의 외국국가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 활동이나 사건 발생시 현장수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국가 간 협력연계방안 마련과, 출입국관리소와 경찰청 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6) 이진수, 이권철, “실종사건 대응절차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기초연구 - 영미법계 국가의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2), (2020.6), 475-501면.

외국인에 대한 각종 사건발생, 실종 및 범죄에 노출, 안전위협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및 연계망 구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sup>7)</sup>

### 3. 경찰청 내부망 정보 공유 시스템 미비

경찰청이 2012년부터 외국인 범죄 통계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정보, 신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범죄 통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외국인들은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경찰은 여성수사계에서 실종자 처리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은 실종자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문제발생시 외사계에서 별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 실종수사팀, 외사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관련 정보공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실종자 조사, 처리에 소극적이고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적을 떠나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경찰청 내부에서 우선 부서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종자 발견을 위한 정보공유 등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sup>8)</sup> 이제는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모든 부서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실종예방과 발견을 위해서 공동대응을 하여야 한다.<sup>9)</sup>

### 4. 외국인 업무 전담 대응 업무처리 문제

외국인은 한국말이 서투른데서 비롯한 소통의 문제, 서로의 생활방식 등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문제가 시작된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폭행, 폭력, 실종,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한다. 외국인 범죄피해에 대해 사건상담, 처리, 각종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 사건 처리 및 응대에 대해

7) 박종철, 장일식,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17(3), (2018), 45-68면.

8) 이진수, “외부망 활용 실종수사시스템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8(1), (2020.2), 57-72면.

9) 이하섭,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27(1), (2013), 135-164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소송은 외국인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다 해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 할 수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서는 업무전담 근무자의 신속한 대응과 신원파악, 출국정지,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 5. 외국인 전용 공공 와이파이망 부족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은 외국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필요 정보를 찾을 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권 사본 제출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 사물인터넷(IoT) 망’도 시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총 4,237km의 S-Net에 사물인터넷 기지국(LoRa통신) 1천개소를 새로 구축하여 IoT 망이 땅 바닥에 부착된 IoT 센서를 활용한 ‘공유주차’, 위급상황 감지시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스마트가로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IoT 실종방지’ 같은 ‘스마트시티 서울’ 정책에 활용되어야 한다. 자가통신망과 모세혈관처럼 뻗어나가는 공공 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망이 구축되면 외국인 등 모든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초연결(Hyper-connected) 도시’에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sup>10)</sup>

## 6. 외국인 실종사건 발생과 해결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우리나라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현재 10만 3,442명을 기록했다. 이들이 체류 중 내국인과 섞이지 못하고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중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실종사건 등 사건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실종사건 발생과 해결에 대한 지역적 분포의 확인하고 실종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핫스팟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내고 지역적 요인을 살펴볼 수 있으며, 실종자가 발견된 지역 등을 통해 실종자 발견에 분석적 토대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

10) 김석중, 오평화, 임준엽 외 1명, “트위터를 이용한 실종아동 탐색 시스템,”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41(4), (2014.8), 182-187면.

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 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 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 IV. 외국인 실종사건 대응의 개선방안

### 1. 외국인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운용

최근 외국인에 대한 인권과 평등은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기관이 협조하고 나서야 한다. 우선 외교부의 협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경찰 간에 정보공유, 각 지자체별 외국인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무책임 정책, 범죄에 대한 노출, 실종에 대한 무방비, 안전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부족한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원자료파악이 급선무이다. 외국인에 대한 신원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배려와 조화정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실종되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도 이들을 보호 해줄 장치가 부족하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홀대,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서 벗어나 한국에서의 보호되고 안전한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국가 간 외국인에 대한 협력 시스템 구축 운용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유학생, 고용근로자, 산업기술자, 유학생,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여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하여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통계청이 올해 외국인 고용 실태를 조사 결과, 외국인 취업자가 79만 1,000명으로 국내 일자리 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불법체류자라는 법무부의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귀결이다. 외국인의 불법체류자 전략은 우리나라에서 실종 등 각종 범죄



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이 각종 피해를 입어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가 간 긴밀한 협력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인문제 발생에 따른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하게 상호 신뢰하고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sup>11)</sup>

### 3. 경찰 내부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운용

경찰청 내에 외국인 범죄 등 각종 외사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외사계가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생활안전계 여청수사계와 업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로 자료를 공유해야 만 외국인 범죄, 실종사건 등에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협조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없으므로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업무처리는 과거업무처리에서 한걸음도 발전하지 않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외국인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sup>12)</sup> 최근의 범죄 유형과 가파른 증가세는 우려를 자아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000명당 25.6명으로 내국인 범죄 1,000당 36.3명과 비교하면 거의 2/3 수준이다. 특히 8년 전인 지난 2005년 울산에서 발생한 ‘나기봉씨 실종사건’의 유력한 살해 피의자가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지목되면서 충격을 준 바도 있다. 이처럼 더 이상 손을 놓고 있다가는 공권력조차 맥을 못 추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부서간 자료공유로 사전에 문제의 근원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 4. 외국인 업무처리 전담 부서 구축 운용

외국인은 언어, 문화, 생활방식, 업무처리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하며 인식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외국인에 업무는 각 국가를 이해하고 문화방식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업무처리 전담부서를 구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

11) 김강한, 권건보, “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13(4), (2020), 7-37면.

12) 조준택,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112신고자료 분석과 경찰관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21(3), (2019), 195-226면.

관리소에서 업무, 경찰에서 업무, 지자체에서 업무, 고용부에서 업무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외국인 업무처리에 대한 전담부서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지원해야 하며 기존 체류 관리법에 치중하는 데서 벗어나 사회통합법 등을 제정해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5. 외국인 전용 공공 와이파이망 설치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가장 불편한 것은 언어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지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종사건에 노출되어 있으며, 각종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공공 와이파이망이 설치된 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해 사회경제 사각지대자 등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은 외국인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필요 정보를 찾을 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공 사물인터넷(IoT) 망’도 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땅 바닥에 부착된 IoT 센서를 활용한 ‘공유주차,’ 실종 등 범죄 위급상황 감지시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스마트가로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IoT 실종방지’ 같은 시스템 구축에 활용 될 수 있다. 하루속히 외국인들도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망 설치가 필요하다.

## 6. 외국인 실종사건 발생과 해결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외국인 실종사건 및 범죄사건 발생 시 체류 중인 정보제공으로 경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출동하고 사건에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실종사건 발생과 해결에 대한 지역적 분포, 실종지역을 핫스팟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냄에 따라 실종사건 예방을 위한 순찰과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나라 지역적으로 실종관련 요인을 살펴볼 수 있음에 따라 실종자 발견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13)</sup> 지금까지 외국인 실종에 대한 지역적 발생건수, 대처방안, 예방제도 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지역적 특성과 외국인 나라별 특성, 거주 지역별 특성에 따라

13) 최상기, 우대식, “실종자 신속구조를 위한 효율적인 드론수색방법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19(2), (2019.6), 191-216면.

외국인의 실종과 범죄를 통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실종 및 범죄예방, 범죄사건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출입국관리소에 의해 외국인 지역별 거주지에 대한 정확한 인구통계자료, 경찰의 외국인 실종사건 및 범죄발생 자료를 통해 핫스팟으로 분석하여 실종사건 등에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실종 등 범죄예방 및 사건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sup>14)</sup>

## V. 마무리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실종사건 등 각종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외교부의 협조, 법무부출입국관리소와 경찰 간에 정보공유, 각 지자체별 외국인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무책임 정책, 범죄에 대한 노출, 실종에 대한 무방비, 안전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부족한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서 벗어나 기관 간 정보공유 등으로 한국에서의 보호되고 안전한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간 외국인에 대한 협력시스템 구축이다.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불법체류자라는 법무부의 통계가 나왔다. 외국인의 불법체류자 전략은 우리나라에서 실종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이 각종 피해를 입어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가 간 긴밀한 협력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경찰 내부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운동이다. 경찰청 내에 외국인 범죄 등 각종 외사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외사계가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생활안전계 여청수사계와 업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로 자료를 공유해야 만 외국인 범죄, 실종사건 등에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협조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없으므로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업무처리는 과거업무처리에서 한걸음도 발전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부서 간 자료공유로 사전에 문제의 근원을 차단할 특단의 대

14) 이영립, 이권철, “실종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기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18(4), (2020), 91-100면.

책이 요구된다. 넷째 외국인 업무처리 전담부서 운용이다. 외국인은 언어, 문화, 생활방식, 업무처리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하며 인식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외국인에 업무는 각 국가를 이해하고 문화방식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업무처리 전담부서를 구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국인 전용 공공 와이파이망 설치운영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가장 불편한 것은 언어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지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종사건에 노출되어 있으며, 각종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공공 와이파이망이 설치된 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sup>15)</sup> 여섯째 외국인 실종사건 발생과 해결에 따른 신속한 정보제공이다. 외국인 실종사건 및 범죄사건 발생 시 체류 중인 정보제공으로 경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출동하고 사건에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실종사건 발생과 해결에 대한 지역적 분포, 실종지역을 핫스팟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냄에 따라 실종사건 예방을 위한 순찰과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벌써 외국인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의 자료 공유 및 시스템 구축 등은 실종사건 등에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실종 등 범죄예방 및 사건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

15) 이진수, “경찰운영 빅데이터를 통한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19(1), (2019.3), 215-234면.

## 《참 고 문 헌》

- 경찰청, “2014 경찰백서.”
-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실종수사 업무 매뉴얼, 2020년 1월.
- 경찰청, 주요국 치안시책, 2014.
- 김강한·권건보, “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13(4), (2020), 7-37면.
- 김석중·오평화·임준엽 외 1명, “트위터를 이용한 실종아동 탐색 시스템,”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논문지: 시스템 및 이론 41(4), (2014.8), 182-187면.
- 김양현,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11(3), (2009), 33-56면.
- 복지부,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 2005. 11. 30. 보도자료.
- 박종철·장일식,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17(3), (2018), 45-68면.
- 윤상연·염운호·유고은, “치안 목적 안면인식기술 관련 법제도 검토: 실종자 신원확인 복합인지 기술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20(3), (2020.9), 25-61면.
- 이건수, “경찰운영 빅데이터를 통한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19(1), (2019.3), 215-234면.
- 이건수, “외부망 활용 실종수사시스템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8(1), (2020.2), 57-72면.
- 이건수·이권철, “실종사건 대응절차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기초연구 - 영미법계 국가의 대응절차를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2), (2020.6), 475-501면.
- 이건수, “초기 실종사건 위험성 판단에 따른 대응절차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3), (2020.9), 549-571면.
- 이영림·이권철, “실종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기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18(4), (2020), 91-100면.
- 이하섭,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27(1), (2013), 135-164면.

조준택,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112신고자료 분석과 경찰관 면담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21(3),(2019),195-226면.  
최상기·우대식, “실종자 신속구조를 위한 효율적인 드론수색방법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19(2), (2019.6), 191-216면.  
출입국관리사무소, 2020년 8월 30일자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통계청, ‘2018년 국제인구이동 통계 발표자료.’  
황문규, “초국가적 범죄의 개념과 우리나라 경찰의 대응 방향”, 「경찰학 연구」, 11(4), 2011.

<http://missingpersons.police.uk/en-gb/home>

<https://www.fbi.gov/wanted/kidnap>

<https://www.namus.gov/>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finding foreign missing persons**

**Lee, Keon-Su\***

Currently, according to immigration statistics, we live in the era of 2,110,610 foreigners as of August 31, 2020. Unlike in the past, the appearance of our society has changed greatly as we live and work with foreigners. If you take the subway, you can meet foreigners in any car, and even in rural areas, you can sometimes see a new foreign house holding a hoe and hanging a field. About 394,879 illegal aliens were not register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statistics. The Immigration Office, August 30, 2020, Statistics Monthly on Foreign Policy for Immigration and Immigration.

In the case of these illegal aliens, they are in a blind spot in criminal safety, and in the event of a missing or accidental death, they are converted into a long-term unsolved case due to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ir identities. Foreigners live together in our society, but there are currently serious problems such as various criminal cases against foreigners, accurate crime statistics on missing cases, crime prevention measures, and lack of data sharing among departments and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wide network for the discovery of foreign missing persons, establish and operate a missing law and system to establish a rapid reporting and discovery system.

**Key Words**

Missing foreigners, criminal statistics of foreigners, national network, missing laws, system establishment, integrated search.

---

\* Professor of Police Studies at Baekseok University.